

KIEP

##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10월 1일

ISSN 1976-0507 Vol. 3 No. 46

## 독일 총선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전망

김 군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이 현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3460-1226)

■ 2009년 9월 27일에 실시된 제17대 독일총선에서 기민/기사당이 사민당을 누르고 승리함.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총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 우파연정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따라서 기민당의 메르켈 현 독일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음.

■ 우파연합 정권은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되, 양당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양당 모두 세율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고, 특히 노동자 해고의 자유 및 금융감독 규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번 독일 총선의 특징은 중도좌파 사민당의 지지율 급락과 더불어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중도좌파 정당이 '신중도(新中道)' 노선을 주창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자, 경제적 약자들은 전통적인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한편,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함으로써 중도좌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메르켈 총리의 우파연정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등 중도우파적 성격을 띠는 정당과 인물들도 시장친화적 정책을 주장하되 사회정책의 강화 또한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금융위기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일부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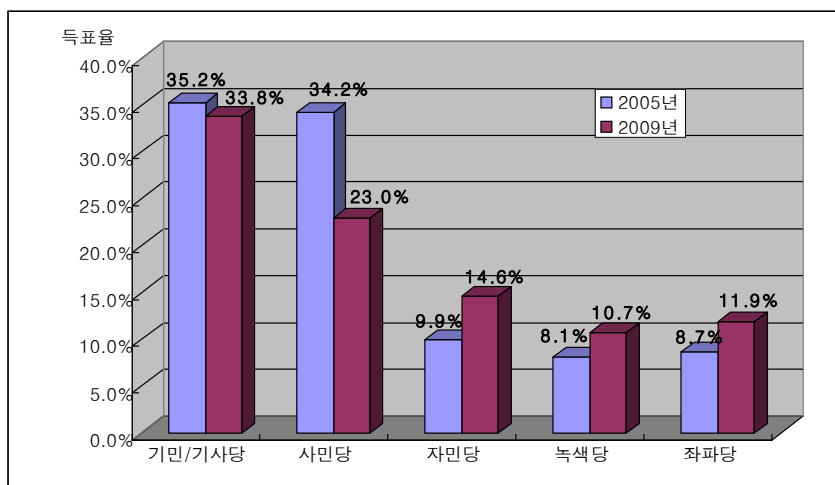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총선 결과 분석

### 가. 총선 결과

- 2009년 9월 27일 실시된 제17대 독일총선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사민당(SPD)을 누르고 승리함.
- 기민/기사당은 33.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사민당의 득표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23.0%에 불과하여 기민/기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
- 기민/기사당은 2005년 총선결과보다 1.4%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사민당의 경우 무려 11.2%포인트가 하락하여 기민/기사당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양대 정당을 제외한 자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소수정당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그림 1. 2005년, 2009년 총선의 정당별 득표율 비교



자료: 독일선거위원회(Bundeswahlleiter).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총 의석수가 과반을 넘어 우파연정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따라서 기민당의 메르켈 현 독일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음.
- 의석수를 보면, 기민/기사당이 2005년보다 13석 증가한 239석, 자민당이 32석 증가한 93석을 기록하여 총 622석의 의석 중 차기 우파연정이 모두 332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함.
- 반면, 사민당은 2005년보다 무려 76석이나 감소한 146석, 좌파당과 녹색당은 각각 22석과 17석이 늘어난 76석과 68석으로 나타남.

표 1. 독일 총선 결과(정당별 의석수)

|        | 2005년 총선 | 2009년 총선 |
|--------|----------|----------|
| 기민/기사당 | 226      | 239      |
| 사 민 당  | 222      | 146      |
| 자 민 당  | 61       | 93       |
| 녹 색 당  | 51       | 68       |
| 좌 파 당  | 54       | 76       |
| 합 계    | 614      | 622      |

자료: 독일선거위원회(Bundeswahlleiter).

#### 글상자. 독일의 선거제도

- ▶ 혼합적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띠는 독일 총선은 소선거구제 방식의 직선제와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른 비례대표제에 의해 의회 진출이 결정됨.
- 독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역구 선거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선거 등 1인 2표제로 실시됨.
- 즉 1기표는 299명의 해당 지역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최다득표자가 선출되는 반면, 2기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로, 5% 조항 혹은 3명 이상의 지역선거구 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에 한해 의회 진출을 허용하고 있음.
- ※ 여기서 5% 조항이란, 유효투표 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의회 진출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정치적 분열 방지 및 통치력 있는 다수당 설립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으로는 지역구 299명, 비례대표 299명 등 총 598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2기표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초과될 수도 있음.
- ※ 독일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16대 총선에서는 15석(기민당 6석, 사민당 9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했으나,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기민당 21석, 기사당 3석이 발생함.

#### 나. 우파정당의 승리 요인

- 기민/기사당 승리의 요인은 금융위기에 원만히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메르켈 현 총리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5년에 취임한 메르켈 총리는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들을 도입하여 당시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던 독일경제가 회복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음.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기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항상 선두를 유지하였음.

- 2001~05년 사민당 정권 기간에 독일경제는 연평균 약 0.6% 성장의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나,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기간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4%와 2.6% 성장하며 경제가 회복됨.
- 또한 경제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보통 집권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메르켈 총리의 위기대처 능력이 높은 지지를 얻음.
- 한편 Economist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 국민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변화를 원한 다기보다는 독일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위기 시 무난하게 대처해온 메르켈 총리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sup>1)</sup>
- 또한 우파정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4.7%포인트나 상승한 데는 기민/기사당과 정책적 유사점이 많은데다 연정 파트너로서 가장 유력시되어 세금감면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개신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자민당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음.
-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자민당은 녹색당의 급부상으로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았으나 이번 총선 결과 기민/기사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큼.
- 사민당은 기민/기사당과의 대연정으로 인해 중도좌파라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상쇄할 만한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패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호해왔으나, 2000년대 상반기에 겪었던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당시 사민당 정권의 슈뢰더 총리는 ‘Agenda 2010’과 같은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sup>2)</sup>
- 그러나 당시 추진했던 구조개혁정책은 세율 인하, 복지 축소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담고 있어 중도좌파적 정책이 희석되었고, 기민/기사당과의 대연정 시에도 메르켈 총리의 시장친화적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좌파 지지자들이 다른 중도좌파나 강경좌파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됨.

1) Economist(2009. 9. 17), “A change of partners?”

2) ‘Agenda 2010’은 2003년 슈뢰더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소득세율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실업수당 및 연금 축소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상당부분 담고 있음.

## 2. 우파연정 출범 예상

- 독일연방 총리의 선출은 연방하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어느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는지도 중요함.
- 연임이 가능한 총리직은 연방의회의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과거 일당 독재의 역사를 우려하여 개별 정당의 득표율이 50%를 상회했어도 단일 정당의 집권은 한 번도 없었으며 반드시 연정을 구성하여 의회에 진출하였음.
- 보통 기민/기사당 또는 사민당을 중심으로 소수정당과의 연정이 형성되는데,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대연정이 형성되기도 하였음.
-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이루는 대연정의 경우, 1966년과 2005년 두 번 있었으나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대연정은 항상 최후의 선택이었음.

그림 2. 정치적 성향으로 본 역대 총선의 연정

| 좌파  |       | 중도  |        | 우파  |
|-----|-------|-----|--------|-----|
| 대   | 연     |     |        |     |
| 1대  | 1949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2대  | 1953년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3대  | 1957년 |     | 기민/기사당 | 독일당 |
| 4대  | 1961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5대  | 1965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 1966년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
| 6대  | 1969년 | 사민당 | 자민당    |     |
| 7대  | 1972년 | 사민당 | 자민당    |     |
| 8대  | 1976년 | 사민당 | 자민당    |     |
| 9대  | 1980년 | 사민당 | 자민당    |     |
| 10대 | 1983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11대 | 1987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12대 | 1990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13대 | 1994년 |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14대 | 1998년 | 녹색당 | 사민당    |     |
| 15대 | 2002년 | 녹색당 | 사민당    |     |
| 16대 | 2005년 | 사민당 | 기민/기사당 |     |

자료: Worldmark, *Encyclopedia of the Nations*, 11th ed. 참고하여 필자 작성.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민/기사당이나 사민당의 적합한 연정파트너는 주로 우파인 자민당이었는데, 중도좌파의 녹색당이 창당되면서 사민당은 정책노선이 비슷한

녹색당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하여 1998년과 2002년에 슈뢰더 총리가 집권한 좌파연정이 형성됨.

-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간 연정 시나리오가 등장하였으나 정당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기민/기사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파연합 정권 출범이 가장 유력시됨.
-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는 자민당과의 연정 희망을 밝혔으며, 자매당인 기사당 역시 대연정보다는 자민당과의 보수연정을 선호함.
- 자민당의 베스터벨레 대표도 메르켈 총리와의 협력의지를 밝혔으며, 보수연정의 형성시 메르켈 기민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표 2. 독일의 주요 정당 현황

| 정당명<br>표기      | 상징<br>색상 | 성향     | 정당 대표                                              | 특징                                                                                              |
|----------------|----------|--------|----------------------------------------------------|-------------------------------------------------------------------------------------------------|
| CDU<br>(기민당)   | 흑        | 중도(우)파 | Angela Merkel<br>(앙겔라 메르켈)                         | 현 집권여당으로 본질적으로 중도우파이나 최근 중도(Mitte)라는 표어로 중도파임을 강조하고 있음.                                         |
| CSU<br>(기사당)   | 흑        | 중도우파   | Horst Seehofer<br>(호르스트 제호퍼)                       |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하는 기민당의 자매당으로 기민당과 같은 정치노선임.                                                  |
| SPD<br>(사민당)   | 적        | 중도좌파   | Frank-Walter Steinmeier<br>(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존하는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16대 총선에 기민당과 대연정을 이루어 집권함.                                  |
| FDP<br>(자민당)   | 황        | 우파     | Guido Westerwelle<br>(귀도 베스터벨레)                    |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친기업적인 우파 정당으로 녹색당의 등장 전까지는 연정 파트너로서 제3당의 역할을 함.                                     |
| Grüne<br>(녹색당) | 녹        | 중도좌파   | Claudia Roth (클라우디아 로트) / Cem Özdemir (첸 웨즈데미어)    | 녹색정치를 표방하는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으로 사민당과 비슷한 중도좌파의 성향을 보여 함께 두 번의 연정을 형성함.                                 |
| Linke<br>(좌파당) | 적        | 좌파     | Lothar Bisky (로타 비스키) / Oskar Lafontaine (오스카 라폰텐) | 구동독의 사회주의 정당(민사당: PDS)과 사민당 탈퇴 구성원들이 세운 정당(노동사회정의당: WASG)이 합당하여 설립한 정당으로 주로 구동독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음. |

자료: 각 정당 및 독일선거위원회(Bundeswahlleiter)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3. 우파연합 정부 탄생 시 향후 정책방향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비교적 비슷한 성향의 우파로서 근본적인 정책방향은 같음.
-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은 이번 총선에서 ‘독일’ 을 유난히 많이 언급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성 및 생활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강조함.
- 한편 기민/기사당보다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자민당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친

기업적인 정당으로서 중산층 강화 및 규제 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금정책에서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확대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바, 이른바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기민/기사당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부터 최저소득세율을 현 14%에서 12%로 인하하고, 42%의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하한선을 5만 2,552유로에서 6만 유로로 상향조정하며, 성인 및 자녀 모두에 8,004유로의 소득공제를 약속함.

- 자민당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되 각각 3단계(10%, 25%, 35%)와 2단계(10%, 25%)로 간소화하며, 가족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인하하는 한편, 성인 및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공약함.<sup>3)</sup>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자민당이 강조하는 기업의 노동자 해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민/기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양당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기민/기사당은 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최저임금제에 반대하고 산업별로 자율적인 최저임금제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자민당은 해고 관련 규제를 받는 기업의 규모를 기존의 10인 이상 기업에서 20인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의 노동자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양당은 모두 자녀의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사회 및 교육정책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양당은 공통적으로 출산 장려금 및 자녀양육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양당은 EU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원자력 발전의 사용기한을 연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2012년까지 17개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현 대연정의 합의를 폐기하고 가동기한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독일경제는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이 많아 상속세 인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게 됨.

- 양당은 교토의정서 후속 합의 및 EU의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목표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전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 세계금융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금융기관 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예상됨.
- 기민/기사당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 감독부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은행 및 헷지펀드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국유화된 금융기관을 다시 민영화하는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기관 감독은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파연합 정권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되, 양당 간 조율을 거쳐 현 대연정하의 정책에서 점진적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양당 모두 세율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와 속도에는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책 간 조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특히 노동자 해고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감독 규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주요 분야별 공약 비교

| 분야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 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부터 최저 소득세율을 현 14%에서 12%로 인하</li> <li>- 최고소득세율(42%)이 적용되는 소득하한 선을 5만 2,552유로에서 6만 유로로 상향 조정</li> <li>- 성인 및 자녀 모두에 8,004유로의 소득 공제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인하 및 간소화: 3단계로 구성하여 각각 10%, 25%, 35%로 설정</li> <li>- 성인 및 자녀 모두에 8,004유로의 소득 공제 적용</li> <li>- 법인세 인하 및 간소화: 2단계로 구성하여 10~25% 부과</li> <li>- 가족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인하</li> </ul> |
|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의한 일괄적인 최저임금제에 반대, 산업별 자율적인 최저임금제 주장</li> <li>- 노동자의 자유로운 해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 강조</li> <li>- 연방 차원에서의 고용지원센터가 아닌 지역 직업센터(Kommunale Jobcenter)를 활용하여 고용 활성화</li> </ul>                                                                  |

표 3. 계속

| 분야     | 기민/기사당                                                                                                                                                                                                                                                         | 자민당                                                                                                                                                                                                                                                                   |
|--------|----------------------------------------------------------------------------------------------------------------------------------------------------------------------------------------------------------------------------------------------------------------|-----------------------------------------------------------------------------------------------------------------------------------------------------------------------------------------------------------------------------------------------------------------------|
|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양육 보조금 증액(셋째부터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혜택 확대)</li> <li>- 출산장려금의 개선</li> <li>- 신생아가 있는 부모의 part-time 업무를 허락하고 최대 28개월까지 정부지원</li> <li>- 2013년까지 전국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시설이용 요금의 무료화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정책의 일환으로 사설 자산보장 금융상품 강화</li> <li>- 세금납비 방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축소 계획</li> <li>- 실업 및 각종 사회적 보조금을 시민지원금(Bürgergeld; Citizen's Income)으로 통합하여 단일화된 기관이 정률로 지급</li> <li>- 자녀 1인당 월 200유로의 양육비 지원</li> <li>- 출산장려금의 유연한 관리</li> </ul>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대비 10%를 교육 및 연구에 투자</li> <li>- 이민자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을 강화하여 2010년까지 독일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li> <li>- 독일-이슬람 컨퍼런스를 통해 독일 내 무슬림 사회를 독일 사회에 통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대비 7%를 교육에 투자</li> <li>-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부여<sup>4)</sup></li> <li>-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장학금제도 설립</li> </ul>                                                                                                  |
| 기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강화 일환으로 2011년까지 국가 통계 및 보고 의무를 25%로 경감</li> <li>- 공공 및 민간부문 공동으로 GDP 대비 3%의 R&amp;D 투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li> <li>- R&amp;D에 대한 효율적 지원</li> </ul>                                                                                                                                                                   |
| 금융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 및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감독 소홀을 비판</li> <li>- 은행부문과 헷지펀드 등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조</li> <li>- 유럽 차원의 독립적인 평가기관 (Rating-agency)에 대해 찬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을 다시 민영화하는 법안 제시</li> <li>- 금융시장에서 관리자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 발생시 책임이 있는지 여부만 판별</li> <li>- 유럽 차원의 독립적인 평가기관 (Rating-agency)에 대해 찬성</li> </ul>                                                                                     |
| 에너지/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의 추가적 건설은 반대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li> <li>- 202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li> <li>- 에너지 시장의 경쟁 강화</li> <li>-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40% 이상의 CO<sub>2</sub> 방출 감소</li> <li>- 배출권거래제시장의 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발전의 사용기한 연장</li> <li>- 에너지 판매세(혹은 환경세; energy sales tax 혹은 eco-tax)를 19%에서 7%로 인하</li> <li>- 에너지 시장의 경쟁 강화</li> <li>-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병행한 이용에 찬성</li> <li>- EU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 준수 및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개발</li> </ul>         |

자료: 각 정당의 공약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4) 독일의 교육제도상으로는 초등학교 5~6학년 경 진학 진로가 결정됨.

## 4. 요약 및 평가

-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재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지난 16대 총선보다 연정 형성 및 내각 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본법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회는 총선 후 30일 이내에 소집하여 다수결에 따라 총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협력구도가 가장 유력한 연정 구성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상호 선호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조속한 내각 구성이 예상됨.
- 한편 전통적인 좌파적 정당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여 ‘신중도(新中道)’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그동안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중도좌파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 총선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 1998년 사민당의 슈뢰더 전 총리는 ‘신중도’ 노선을 표방하며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2002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음.<sup>5)</sup>
- 이러한 좌파정당의 중도적 노선으로의 선회,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은 2000년 들어서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흔히 영미식 경제모델로 대표되는 미국 및 영국 경제 호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임.
- 슈뢰더 전 총리가 2003년 추진했던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Agenda 2010’도 복지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즉,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유럽식 경제는 과도한 사회복지 및 정부의 시장규제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 및 영국경제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에 좌파정당은 공공부문과 복지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중도적 노선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도입은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결국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만을 고조시켜 중도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은 영국의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블레어 전 총리가 주창한 ‘제3의 길’과 성격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1997년 ‘제3의 길’을 주장하며 정권을 획득한 블레어의 노동당은 보수당의 대처 전 총리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음.

■ 또한 중도좌파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좌파정당 및 우파정당의 약진이 이번 총선의 특징임.

-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그동안 중도좌파를 지지했던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중도좌파에 실망하는 한편, 오히려 복지정책 강화, 시장지향적 개혁의 철폐,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 인상 등을 강조하는 좌파정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더욱 누리게 된 계층들이 더욱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독일 총선 결과를 통해 볼 때,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및 경제양극화 심화 현상이 중도적 노선의 정당들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적 좌파 및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등 중도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당과 인물들도 전통적인 시장친화적 정책을 주장하되, 사회통합을 중요시하는 사회정책 강화 또한 강조하고 있음.

- 메르켈 총리뿐만 아니라 바로수(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 중도우파의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자신들이 중도적 성향의 정치가임을 강조하고 있음.
- 즉 메르켈 총리나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모두 중도우파의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는 소속당인 기민당이 중도파를 지향하는 당임을 강조하였고 바로수 위원장도 자신이 중도우파임을 부정하였음.<sup>6)</sup>
- 최근 중도우파 지도자 및 정당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유럽경제가 받아들였던 영미식 경제정책의 부작용(경제적 양극화 심화 내지 소득불평등 악화)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세계금융위기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도 해석됨.

■ 따라서 메르켈의 기민/기사당이 가장 기업친화적 정당인 자민당과의 연합을 통해 우파연정을 출범시킨다고 하더라도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총선 승리 후 메르켈 총리는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2011년 이전에 감세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지나치게 친기업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자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점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KIEP**

6)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2009년 9월 16일 유럽의회에서 이루어진 재임결정 투표에 앞서 본인은 중도우파가 아닌 "유럽파"임을 주장함.